

‘괴물 폭우’ 쏟아지는데…전남도, 도시침수 대응력 ‘낙제’

김재철 도의원 도정질문 집중추궁

맨홀 21만여개 중 추락 방지시설 3만개 그쳐…고흥·화순 등 전무 하수관로 정비 등 도비 편성안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도 영성



섬 지역' 맨홀의 추락 방지시설 현황은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하수관이 역류하면 맨홀 뚜껑이 열리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집중호우가 오면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추락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되고, 환경부가 국비 지원을 계획중인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으로, 맨홀에 빠지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도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16개 시군, 94㎢로 여의도 면적의 32배, 축구장 1만3,200개 정도로 광장히 넓다"며 "2013년에 지정된 목포시의 경우 시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시홍수 발생원인을 외수와 내수 범람으로 구분돼 있고, 내수 범람의 원인은 '하수관거 용량 초과, 우수배제 불량'이다"며 "내수 범람의 원인과 밀접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전체 사업비 중 하수관로 정비나 도시침수 대응사업에는 도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수관 용량이 부족한 곳의 빗물저류시설 설치 등 침수 예방을 위해 도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도 전혀 투입하지 않으면서 전라남도가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7월 14일 기준 올해 전남의 온열질환자는 누적 105명, 전국 순위 6위로 시도별 인구수를 대입해 보면 전남이 인구 대비 온열질환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응급실을 찾은 105명의 온열질환자에 대한 지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있지만, 고흥, 보성, 해남, 함평, 영광군 등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 항목에 가입한 5개 군 지역에 사는 도민들만 진단비 10만원을 받을 뿐 나머지 시군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기후취약계층 16만명을 포함해 인구 1,400만명의 '기후보험' 가입에 보험료로 34억원을 집행한 것을 감안하면 전남 인구 180만명을 기준으로 4억3,000만원 정도 예상된다"며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 환경적인 특성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담은 '탄소중립 기본 조례'에 근거한 구체적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하천과 하수도, 수자원 등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했지만, 전라남도는 하천과 하수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며 "지난해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됐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전남도는 이 역시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시계획 단계부터 하수관의 통수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등 방재 부문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뗄 수 있도록, 비가 올 때마다 침수 걱정을 해야 하는 '저지대 주민'이 없도록, 전라남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도시침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 수해 현장 찾은 박찬대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가 21일 광주 수해 피해 현장인 서구의 한 가구 백화점을 찾아 복구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일 도의원 “간병비 부담완화 특단 대책 마련을”

초고령사회 입법·정책 촉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이날 열린 2025년 상반기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은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간병 정책 대응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간병비 상승률이 2020년 2.7%에서 2023년 9.3%까지 급등, 월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등 근로자 평균 연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다”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가족 붕괴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 제주도, 경북 등은 이미 간병비 지원 조례와 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전남도 역시 정부 제도 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고령층 돌봄 수요에 대응해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학업중단 위기 학생과 관련 “전남은 최근 3년간 학업

중단 학생이 3,700여명에 달하며, 이중 고등학생 비율이 70%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학업중단 학생 조기발굴과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교육청이 학업중단 학생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업중단속려제,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의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다”며 “교육 접근권의 불평등을 해소 위해 서로 도교육청이 책임있는 개입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연수대상의 전체 교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근산 기자

최선국 도의원 “에너지 전담 공기업 설립해야”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 현실화 공공주도·재원 재설계 등 촉구



는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외 부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인 ‘2030년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와 관련해 “현재 전남도가 도민 전체를 위한 에너지 기본소득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사실상 ‘0원’ 수준”이라며 “REC 가중치나 집적화단지 수익도 특정 지역에만 한정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원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전남개발공사의 자본 증자 및 도 직접 출자를 통한 공공개발 확대 △도민 펀드 및 기금을 활용한 공공지분 확보 △전

남에너지공사 설립 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제주에너지공사의 컨소시엄 의무 참여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전남 역시 에너지기본소득 실현의 거점이자 재정 운용의 중심체로서 전담 공사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이나 일부 계층에 국한된 혜택이 아닌, 전 도민이 함께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라며 “이를 위해 전라남도가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공공투자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현재 재생에너지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형 공공주도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산 기자

강선우 임명 수순…이재명 정부도 ‘의원 불패’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번 정부에서도 ‘의원 불패’ 신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이 야당은 물론이고 친여 성향 단체도 지명 철회를 주장한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데에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은 각종 선거에서 이미 검증된 거친데다

야당 의원과의 의정 교류 등에 따라 인사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실제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새 정부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초대 내각에 현역 의원을 대거 포진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측면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서 19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절반가량

인 8명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이들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명 절차가 완료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5선의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무난한 임명이 예상된다.

강 후보자의 경우 보좌관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 등으로 낙마 위기에 몰렸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제출부 요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김현수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마을

광주광역시동구

GWANGJU DONGGU

당신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니다

우리동네
빵집에서
인공지능
까지!!

1

창업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정책 수립

2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실현하는 공간

3

창업을 위한 모든 서비스와 협업 네트워크 연결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창업교육, 자금상담 등

청년창업 허브 사업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및 협업공간 지원

마을공방 운영사업

공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지원

일자리 공유 카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광주주얼리지원센터

주얼리 소공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주얼리를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 및 다양한 지원

www.gjewelry.or.kr

1F

· 주얼리 전시판매장
· 주얼리 체험공간

2F

· 공용장비실

3F

· 교육실
· 세미나실
· 바이어 상담실
· 운영사무실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서석동)
TEL. (062) 608-3991~3993
FAX. (062) 608-2719

광주광역시동구

GWANGJU DONGGU

창업지원센터